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다음달 5% 인상

국토부 8년만에...분양전환가격·임대료 인상 불가피

전국 분양전환 대기 7만가구...입주자·건설사 모두 불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8년 만에 인상돼 다음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는 분양전환가격을 내야 하는 입주자는 물론 건설업체까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저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는데 정부는 이 단가를 지난 2008년 말 인상 이후 7년간 동결했

다. 이로 인해 5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동결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사업자의 손실이 커져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 초과~60㎡ 이하의 표준건축비는 종전 ㎡당 970만9000원(3.3㎡당 293만7000원)에서 1019만4000원(308만4000원)으로, 21층 이상 전용 40㎡ 초과~50㎡ 이하의 종전 ㎡당 1018만1000원(3.3㎡당 308만원)에서 1069만원(323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6월 중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고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은 주로 5년 임대

의 분양전환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최저 임대료가 종전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대다수의 분양 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에서 분양전환을 못하고 대기 중인 5년 민간 임대는 약 6만~7만 가구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정부의 표준건축비 인상 폭이 너무 작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의 71% 선에 그친다는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것으로 자체·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돼 6개월마다 한번씩 고시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2008년 말 이후 표준건축비가 조정되지 않는 동

안 자체·노무·장비 등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는 20% 이상 상승했고 2014년 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도 2008년 말 대비 15.3%나 올랐는데 표준건축비만 5% 인상에 그친다면 업계의 손실을 만회할 길이 없다”며 “한꺼번에 20%를 올릴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 추가 인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한 중소 건설사의 관계자는 “최소 3년 마다 조정해야 하는 표준건축비를 8년 만에 올려주면서 인상 폭이 너무 낮아 실망스럽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건축비를 올리기 위해 재정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눈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장기 동결로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현실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56.73 (-11.33)	↑ 금리 (국고채 3년) 1.47% (+0.02)
↓ 코스닥 683.87 (-12.08)	↑ 환율 (USD) 1182.60원 (+8.90)



2016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식. JB그룹 광주은행은 18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상생발전을 위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정석주 이사장, 윤장현 광주시장, 송중욱 광주은행 부행장. <광주은행 제공>

영세상인에 경영안정기금 최대 2억원

광주은행-신보재단 '금융지원 협약'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상생발전을 위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19일부터 "광주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협약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것으로,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골목상권 5억원 포함)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12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재단 또는 광주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특별출연 보증은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한은 5년 이내이다. 또한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요율은 기업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0.8%~1.0%까지 우대 적용, 대출 지원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중욱 영업전략본부 부행장은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지역 수출중소 북미 진출 기회

중소진흥공단, 美 자동차 부품 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창범)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31일까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자동차 부품 박람회(AAPEX)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AAPEX는 Autozone, Napa, 월마트, K마트 등 세계 굴지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참가하는 전문 박람회로 오는 11월1일~3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SEMA전시회와 참가업체간 교류, 바이어 유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미 뿐만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참가업체의 성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는 참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시장성 및 수출잠재력을 고려해 최종 참가기업을 선정할 계획이고 참가비의 50%외에 통역비 100%, 왕복항공료 20%도 지원한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의사가 있는 광주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서를 이메일(kkimy3@sbk.or.kr) 접수 및 코트라 전자포털사이트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LED 특허 동향 한 눈에

광산업진흥회, 종합정보망 확대

“국내외 LED 특허 동향 한 눈에 확인하세요.”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가 LED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LED 융합산업 종합정보망'을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위축된 광산업에 활로모색을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LED 융합산업 허브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는 종합정보망은 전국에 흩어진 10개 LED 융합산업 센터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예로기술 해소와 측정 분석 지원, 표준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특허관례 정보제공, 전시회 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망 내의 LED 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에서는 한국광기술원을 포함한 국내 10개 LED 융합센터 장비 인프라와 전문 인력 DB가 구축됐다. 신뢰성, 측정, 분석 등의 기술 및 분석 지원은 물론 LED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로 상담 해결을 위한 청구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248개 기업이 활용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정보망에 등록하면 언제든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산업의 미래는 융합산업에서 찾을 있다. 특히 LED는 타산업과 다양하게 접목 할 수 있는 만큼 최신정보와 기술동향을 적시에 활용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사물인터넷80,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접목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삼성페이 결제 1조원 돌파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 페이' 누적 결제 금액 1조원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삼성 페이는 지난해 8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9개월만에 누적 결제 금액 1조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제공>

'갑질' 대형마트 3사 239억 과징금 폭탄

공정위 단일 사건 최대... '시정조치 불이행' 홈플러스 검찰 고발

상품대금을 제때대로 깎아 지급하고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상품을 진열시키게 하는 등 대형마트의 고질적인 갑질 횡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동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유동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이들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에는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취약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이런 부당 행위는 2013년 10월 공정위 조사에서도 적발됐지만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다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인건비 전가 행위 역시 2014년 3월 공정위가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3.0으로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중소기업과의 행복한 동반성장

중소기업의 기술제품 개발에서 판로망 개척까지, One-Stop서비스로 한국가스공사는 함께 합니다.